

## ‘관세 협상 자축’ 뒤에 닥친 채권 시장의 비명

광화문·부

김 신 영

경제부 차장



한국 채권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일이 지난주 일어났다.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채권이 ‘떨이’ 수준의 조건에 간신히 낙찰됐다. 한 채권 트레이더는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기관 채권이 이런 험값에 팔린 적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한 실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된다. 국제 금리는 이미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주 한국 국제 금리 상승 폭은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채권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내려간다).

요즘 큰 손실을 본 증권사 채권팀이 구조 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채권은 주식만큼 대대적인 화제가 되지는 않지만 경제적 파급력은 더 클 수 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기업 대출 금리가 따라서 상승하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비용도 불어나 경제에 전반위적인 악영향이 번진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채권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탓에 한국은행이 예상만큼 기준금리를 못 내리게 된 상황이 금리 급등을 유발한 원인으로 꼽혔다. 금리가 내려갈 줄 알고 투자 전략을 짰는데 틀어졌다고 한다.

정부가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관세 협상과 연동된 대미(對美) 투자에 대한 불안감 또한 금리를 밀어 올리는 악재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협상팀을 표창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이렇게 자축할 결과는 아니라고 걱정한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0년 할부, 기업 일부 부담 등은 얻어냈지만 내야 할 돈 3500억달러가 줄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에서 수익을 내 미국에 약속한 연 200억달러를 10년간

관세 관련 對美 투자금 부담에 부동산·고령화 겹겹의 악재  
李 대통령 “관세팀 표창”이라지만 채권 시장은 닥치는 위험에 떠다

대졌다고 한다. “외환시장 충격 없이 감당 가능하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 근거다. 외환시장만 고려해서는 안 될뿐더러 수익이 매년 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돈이 모자라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 채권 시장이 두려워하는 중장기적 위험이다.

설령 수익률이 좋아 돈을 보낼 수 있다 해도 기빠할 일일까. 원래대로라면 수익금은 외환 보유액에 재원입되거나 한은 수익 혹은 국고에 더해진다. 대미 투자금으로 쓰면 결국 나랏돈이 빠져 나가는 구조라는 뜻이다. 200억달러는 약 29조원, 올해 연구·개발 예산과 맞

먹는다. 설상가상으로 환율까지 오르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리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착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돈 버는 사업”에만 투자해 돈을 돌려받겠다는 의미다. 그런 투자처가 어디 있나. ‘100% 수익 보장’을 내세우면 허위 광고로 처벌받는다.

젠스 황의 ‘컨바 회동’과 화기에애한 APEC 정상회의 뒤에 닥친 채권 시장의 암운은 한국 경제의 아슬아슬한 현실을 드러낸다. 정부는 25%일 뺀 관세를 15%로 깎아 다행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트럼프식 계산법’이다. 냉철한 정부라면 한미 FTA로 0%였던 관세가 15%로 올라간 데 더 주목하고 기업과 함께 대비해야 한다.

이런 충격 없이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긴 한국의 국가 부채는 저출산·고령화 비용으로 ‘자동 급증’하게 되어 있다. 국제 발행이 불어날 일만 남은 초장기적 악재다. 정부는 현재 국가 부채(GDP 대비 53%)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 속도다. 올해 10~11월 국제 발행 물량은 지난해의 1.5배 수준에 달하고, 내년에도 늘어날 게 확실하다. 퍼주기 예산으로 나랏빚을 불리기에 어느 때보다 부적절한 시점이란 뜻이다. 경제학 거장 루디 도름부슈는 “위기는 생각보다 느리게 오지만 일단 시작되면 상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진행된다”고 했다. 채권 시장의 비명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06]

### 물방울로 쓴 詩

이것은 물방울이 아니다. 화가 김창열(金昌烈·1929~2021)의 물방울 그림이다. 하지만 작품 앞에 서면 무릎을 치게 된다. 물방울은 틀림없는 그림인데, 종이는 마치 진짜 물이 스뒀다가 마른 듯 울어 있다. 수채 물감으로 그려낸 물방울이니, 종이는 실제로 물을 머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갈색 크라프트지(紙) 위를 주르르 흘러내려 동그랗게 맺힌 영롱한 물방울과 그 아래 젖은 종이의 진한 얼룩은 붓 끝에서 빚어진 환영이다. 김창열의 물방울에서는 이처럼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이 좁아진다.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그는 해방 후 월남해 그림을 배웠다.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으나 곧 전쟁이 일어나 학업

을 마치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고 보니 중학교 동기 120명 중 6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결코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어두운 물감을 화면에 거칠게 올리고 파괴적인 붓질로 그 표면을 가르고 찢어 내듯 해집었다 다시 덮어 주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의 추상화는 전쟁터에서 술하게 봐야 했던 상처와 죽음의 잔상이었다.

김창열이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한 때는 1970년, 파리의 혹독한 겨울이었다. 바람이 들이치는 허름한 작업실에서 캔버스 뒷면에 맺힌 물방울이 아찔했살에 반짝였다. 작고 어리고 맑은 물방울은 금세 화폭에 스며들어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그래서 감동적이었는지



김창열, 물방울, 1978년, 크라프트지에 수채 물감, 73×60cm, 개인 소장.

모른다. 이후 김창열은 거의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물방울을 그리며 지나간 시간을 견뎌다. 고통과 울분,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과 죄책감을 모두 어린 물방울에 담았다. 그의 물방울은 시간이 오래 걸렸던 화가가 물감으로 쓴 시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뉴데일리 newdaily.co.kr

중국 비판하면 수사-기소-재판-처벌...

## "Fucking USA"는 OK! "짱개 Out"은 처벌?

뉴데일리 특종 보도 | 반의사불벌 조항과 친고죄 삭제? | 경찰 마음대로 입건-수사 가능? | 중국식 공안 경찰국가 되나



◀ 이재명 정권은 친중정권이란 속살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공안경찰국가 시대. 그 압출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우고 있다. © 핫Gpt

일본 : 외국인보다 자국민 중시

한-일 두 나라에서 외국인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은 **양국 국민들 거부감이 부쩍 높아진 중국**이다. **한-일 양국의 《외국인 정책》은 완전 반대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체류 외국인의 일탈 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에 제동을 걸고 있다. 반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인이 중국과 중국인을 모욕하면 최고 징역 5년의 중형에 처하겠**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발의** 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는 지난 11월 4일 외국인 정책 관련

각료 회의를 주재하면서 “**외국인의 위법 행위와 규정 일탈에 (일본) 국민이 불안과 불공평을 느끼고 있다. 배외주의와는 선을 그겠지만, 이러한 행위에 정부가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방송을 보니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와 관련,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군사기지 주변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수원(水源) 주변에서 외국인(압도적 다수는 중국인)들이 토지-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막겠다고 한다.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중시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정부나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 들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부쩍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 : 《중국 심기 경호법》 발의

한국에서는 발의된 한 법안이 뉴데일리의 특종으로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반중(反中) 시위》를 예로 들면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화·신정호·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모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평예훼손죄의 (반(反) 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수사기관이 한국인 반중 인사들을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부남은 제안 이유에서 “**개천절 협동(嫌中)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장제, 복고, 팔강》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개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제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공개되자 《**중국 심기(心氣) 경호법**》이란 비판이 빚발쳤다. 미-일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누가 봐도 중국을 의식한 과잉 법안**이라는 질타를 면키 어렵다. 극좌세력 등이 거친 폭력까지 수반한 반미-반일 시위를 할 때, 민주당이 그런 시위를 비판했던 적이 과연 있었던가. 시위 때 나온 《**Fucking USA/ 양키고홈/노 재팬/죽창가**》 운운의 혐오성 구호-노래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반면 **한국 땅에서 활개치는 중국인 간첩 처벌 법안에 반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나도록 방치한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니었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반일 선포도 처벌?”

국민의힘 چون진 의원은 특종 보도한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나라 비판한다고 자국민을 전과자 만들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나. 이 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반일 선포했다고 처벌됐을 것. 중국 심기 경호화자는 《자국민 탄압법》을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춘평에 공감하지 않을 한국인은 드물 것이다.

국민 심기는 무시... 중국 심기만 살펴

한국은 일본 베트남과 함께 중국에 휘둘리지 않았던 몇 안 되는 국가였다. 박정희 정부 시절 중국인들의 경

“대통령 임김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했다.

현재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정황상 아나라고 하기도 어렵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고, 현재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문제를 몰랐다고 한다면 상식 밖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 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 민간 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이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로 민간 업자들을 달래서 그들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된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현황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공수처든 특검이든 빨리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지금이 바로 그 존재 이유가 증명해야 할 때다.

### 검사들 반발,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

검찰의 대장동 비리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포기 직후 사건 담당 수사·공판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의 최고위급인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확산했다. 검찰의 집단 움직임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특정 사건 재판 처리와 관련해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까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검사장급 부장 7명은 10일 노란색 검찰총장 대행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문에 책임이 있는 대검 반부패 부장을 제외한 총장 대행의 핵심 참모 전원이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대검 연구관들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 전국 검사장 18명도 노 대행의 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 대행은 전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내 책임

하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했을 뿐 구체적 경위와 법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전국 8개 주요 지청장들도 같은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장문을 발표한 검사장 18명과 노 대행 사퇴를 요구한 대검 부장 7명은 현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임명한 요직인 전국 지검장 15명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정치적 편 가르기와 검찰 악마화로 국면을 바꿔보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민의 법 상식과 정의감에 너무도 동떨어졌다.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을 차지하게 만들어준다면 법치가 어디에 있나. 힘으로만 누르면 검란(檢亂)은 국민적 반발로 확산될 수 있다.

### 興, 문화재 문제 이슈 만들어 서울시장 선거운동 하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묘를 방문해 이곳에서 17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짓도록 한 서울시 결정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숲이 막히게 된다**”며 “**서울시가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20년 전부터 세운상가 일대의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종묘 문제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세운상가는 58년 된 흉물로 전락했다. 결국 서울시가 세운상가를 허물고 최고 142m의 고층 건물을 만들되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 축을 만들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다시 내놓았다.

이 문제는 결국 소송까지 갔고 최근 대법원은 문화유산 보호구역 밖에서 하는 공사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세운상가 재개발은 물론 문화유산 주변의 도심 재개발도 탄력을 받게 됐다.

문화재 보호를 주무로 하는 부처들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고 상충하는 가치는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금은 문화재 쪽에 너무 치우쳐 도시의 정상적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지경이다.

이상한 것은 이 문제에 갑자기 장관이 나서 아무 상관 없는 ‘김 건희’까지 들먹이며 격하게 반응하더니 이제 총리까지 나선 사실이다. 이들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 것이다. 결국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오세훈 시장을 공격할 소재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비 사업은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김 총리와와의 토론을 제안했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 없이 순전히 문화재 때문이라면 이 토론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 수 있다. 이 문제에 선거정치가 개입하면 합리적 결론 대신 정쟁만 벌어질 뿐이다.

계적-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단속한 덕분이었다.

그랬던 한국에서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중국-중국인들의 국내 영향력을 키워주는 정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의료보험 과잉 제공, 실업급여 문제, 대학 진학 특혜, 대출 특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칫 《**제2의 홍콩**》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혜 수혜자의 압도적 다수는 중국인**이다. 오죽하면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국민 비율이 무려 80% 안팎(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겠는가.

무슨 결정적 약점 잡혔나?

이런 상황에서 중국-중국인을 의식,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악법까지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정말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이재명 정권 내 좌익세력은 도대체 전체주의 공산국가 중국-북한에 무슨 결정적 약점이 잡혀 있길래 그들 앞에만 서면 저렇게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걸까.

권 순 활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1월 9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82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